

토 론

2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에 대한 토론문

박 대 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에 대한 토론문

박대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물리적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공간이다. 즉, 물리적 공간 안에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될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발전과정은 결국 지역사회로 귀결된다.

지역의 협력적 경제시스템 토양이 바뀌지 않고 개별 협동조합이 시장화되는 경향들은 많이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경제도시들은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순환경제와 대안적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발제문에 언급된 협동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이 지역의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의 주요 사회적경제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경험이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다. 결국 신념, 사람, 시간, 협동이라는 명료하게 정리된 요소가 현실에서 얼마나 지난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 사회가 체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충북에서 사회적경제 진영의 논의테이블을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각 진영을 분리하는 사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력에 미숙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하다. 아직 우리에게 사회적경제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어 낸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듯 하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지 사회적경제에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정량적인 성과보다는 본질적인 성찰과 충남에 맞는 접목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충남도에서 고민하는 협동조합 발전 방안은 근본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진단이면서 성찰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성찰과 교육 및 네트워크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욕적인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주체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 주체 발굴을 위한 활동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린다.
2. 개인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상과 방법론 부재에 공감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별 첨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추진배경 및 경과

### 1. 추진배경

- 충북지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생활협동조합이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 자활사업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마을공동체운동 방향 토론회, 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협의기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음.
- 이에 충북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의 초기 논의를 거쳐 사회적경제를 논의하는 큰 틀의 준비모임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게 됨.

### 2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제안내용

- 공공의 사회적경제 사업체 지원 육성 사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시니어클럽, 협동조합 등으로 분산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통합적발전 전략적 측면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 사업들이 개별 사업체의 발굴 육성에 집중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과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망이 취약함.
- 시민사회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제도적 성숙에 비해 시민사회진영에서 새로운 대안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함으로써 지역적 실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7.1), 협동조합기본법(2012.12.1.)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있으나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이 부재함
- 공공경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경제로 구성되는 지역경제 3주체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기 위해선 협동사회경제의 영역을 키우는 시민사회의 통합적 실천이 시급함.

동시에 공공적 사회투자를 통해 소통-신뢰-협력으로 이어지는 협동사회경제의 육성을 위한 협동사회경제에 대한 사회투자도 매우 시급한 현실임.

- 제도적 성숙과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한 “협동사회경제 발굴 육성을 위한 시책과제”의 발굴과 시민제안 사업을 통해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의 정립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순환과 공생, 호혜와 협동의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간 차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를 제안함

### 3. 지역 여건과 주요 활동내용

#### 1) 지역의 분위기와 요구

- 충북지역에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장애인작업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 특히 자활사업 당사자들과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의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자원의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수년간 피력해 옴
- 그러나 지역의 추진동력이 부족하고, 이렇다 할 공통의 이슈를 찾지 못하면서 떠도는 바람으로 남게됨
- 최근 사회적기업의 급속한 확대와 협동조합의 증가는 다시 영역을 넘어선 지역차원의 교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
- 특히 올해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지역경제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핵심적 과제로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이 제안됨
- 이에 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 몇 몇 단위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체 사회적경제 단위에 제안하게 됨.

## 2)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확대 경과

일자	사업내용	비 고			
2000년	자활사업 시작				
2003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실시				
	－ 자활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지역주체 발굴에 기여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2008년	일하는 공동체-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공동 사회적경제 논의테이블 구성				
	－ 사회적기업 허브구축사업 진행				
	－ 중부권 사회적기업 인증지원업무 수행(일하는 공동체)				
2009년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업무(일하는 공동체), 로컬푸드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진행				
2010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컨소시엄 운영(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마을기업 시범사업 실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시행				
2011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컨소시엄 운영(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2년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설립 －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협동조합 친구들 활동 시작				
2013년	충북사회적경제센터 － 사회적기업통합지원기관 위탁(노동부/행안부/충청북도/진흥원) － 협동조합 지원업무 위탁(기재부/진흥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회적경제센터/시민재단컨소시엄) 충북광역자활센터 설립				
	5.16 충북 마을공동체 운동의 발전 방향찾기 토론회 7. 5 충북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발전’ 7.17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충북사회적경제조직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시니어
개수	100	57	50여개	12개	6개